
碩士學位請求論文

北韓의 主體思想과 統一政策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朴 太 柱

1991年度

北韓의 主體思想과 統一政策에 관한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朴 太 柱

指導教授 高 性 俊

1991年 7月 日

朴太柱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審

印

副審

印

副審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方法	3
II. 主體思想의 本質	5
1. 主體思想의 基本構造	5
2. 이데올로기적 機能	9
III. 主體思想과 統一論	13
1. 主體思想과 統一의 基本原則	13
가. 主體의 革命理論	13
나. 祖國統一의 原則	16
2. 主體의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論	19
3. 主體思想과 統一觀	23
IV. 主體思想과 統一政策	26
1. 統一의 두 가지 前途	26
2. 人民民主主義革命의 戰略· 戰術	31
가. 人民民主主義革命의 등장과 性格	31
나. 主力軍· 補助力量의 編成과 鬭爭方法	34
다. 革命의 戰略· 戰術의 時期	36

3.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	39
가. 聯邦制의 提案	39
나. 高麗民主聯邦制의 內容과 問題點	43
V. 結 論 : 要約 및 展望	50
參考資料	53
ABSTRACT	58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식 사회주의의 추진 그리고 동구에서의 선거혁명에 힘입어 이루어진 동독민중의 통일혁명 등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퇴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소간의 데탕트 질서의 형성은 겉프전쟁이 있었음에도 더욱 굳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주에서의 한·소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동아시아의 탈냉전적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북방정책 역시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그동안 진전이 없던 중국과의 수교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외적 환경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외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부터 일본과의 수교교섭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접촉 등 대외관계에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선결문제로 미군철수 및 군사력감축 등을 내세워 증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재래의 速戰速決 전략으로 '한반도 공산화' 통일정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남조선 해방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통일정책 목표를 수정 내지 포기한 적이 없다. 다만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수단의 領域-전략·전술면에서만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¹⁾

1) 최완규, "남북연방제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경남대학교 논문집, 제11집(사회과학편), 1984, p.399.

세계적차원의 냉전이 구조적으로 소멸되면서 동북아에 데탕트질서가 형성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기존의 통일정책 목표를 고수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체사상과 연계시켜 분석·파악하려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북한체제는 그동안 지나치게 남조선혁명을 통한 통일에 그 정당성을 의존해 왔고 **폐쇄체제의 성격상 남북한 관계를 개방하는 경우 체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남한혁명의 논리를 포기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²⁾ 그것은 ‘主體思想’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북한이 ‘남한혁명을 통한 공산화통일의 달성’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승계자 김정일에 의해 金日成主義로 체계화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운동의 강행을 통해 敎條化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정치발전의 목표와 정치활동지침을 결정해 주는 최고이념이며 사회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의 행동준칙을 결정해 주는 도덕규범이고 행위의 善惡을 가려주는 종교가 되 버렸다.³⁾

그러므로 북한의 통일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주체사상에서 想定하고 있는 통일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자주적 통일이론은 “조선의 현실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리론임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강령으로…… 또는 과학적 평가에 기초한 독창적 전략·전술의 方針”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의 성격은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

2) 정천구,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체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전망」(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1991.4.26), p.62.

3) 이상우, “정치이념, 사회변화와 대남정책”, 김준엽·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법문사, 1985), p.294.

4)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리론」(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5), pp.11~12.

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⁵⁾라고 하여 김일성의 통일정책은 남조선혁명의 이론과 전략·전술로 당연히 주체사상의 기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問題意識을 토대로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정책과의 연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통치이데올로기로 내세우고 있는 주체사상의 본질을 살펴 보고, 둘째, 주체사상에 연계되는 조국통일론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그 논리 뒤에 숨어 있는 통일정책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통일의 전략·전술을 釐明하고자 한다.

넷째, 향후 주체사상과 통일정책의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공산주의체제의 모든 정책적인 자료는 철저히 통제·조작된 것으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표출한 言明·行爲를 어느 정도 의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면밀히 분석하면 그들의 의도 및 미래의 정치정향까지도 逆추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문건을 기초자료로 하는 ‘歷史記述的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해 북한정치체제를 전체적으로 정리·분석하는 데는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조사와 함께 주체사상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통일정책과의 연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정리·분석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을 위주로 학자들의 연구논문, 그외 부수적인 간행물 등을

5) ‘조선노동당규약전문’, 「북한개요」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86), p.339.

참고 하였다.

그리고 논문의 구성은 제5장으로 나누어 제2장에서는 주체사상의 구조와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파악하며, 제3장에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론으로 혁명론과 통일의 원칙을 살펴보고 그들의 최종목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이론과 통일관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통일의 두 가지 前途(방법)와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을 파악하고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민주연방제의 창설 등 주체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그 의도를 분석해보려 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부분으로 요약 및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김일성의 '전 한반도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정책에 관한 논리와 의도를 파악하고 혁명과 통일의 전략·전술을 糾明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II. 主體思想의 本質

일반적으로 全體主義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고수하고 있는 公式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철저히 통제되며 이는 集團主義擁護論(collectivist argument)으로 정당화 시킨다.⁶⁾

북한공산정권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상적 토대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1960년 중반부터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주체사상은 '혁명의 총체적 임무'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상의 '지도적 지침'으로 설정하여 당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결정의 준거틀이 되고 있으며 북한대중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전일적인 규정령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체계화된 주체사상의 본질을 통일론과 혁명론에 기초하여 그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主體思想의 基本構造

조선노동당의 통치이데올로기인 동시에 국가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主體'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꾼들 앞에서 黨의 이데올로기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때였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진리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소련식도 중국식도 아닌 "우리 식을 만들 때가 왔다"고 강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

6) A. James Gregor, *Contemporary Radical Ideologies* (New York: Random House, 1968), p. 8.

의 지침이며 창조적 학설”⁷⁾이라고 역설했다.

초기에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로 공식화 했으나 60년 중반 이후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보다도 주체사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4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⁸⁾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국가이념으로 공식화 됐음을 뜻한다.

이렇듯 독자적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치를 점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권력을 김정일에게 이양하는 권력승계체제 구축이 본격화 되면서 ‘김일성주의’로의 위상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김정일에 의하면 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며, 세계의 모든 피착취, 피압박인민에게 투쟁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독창적 지도사상이라는 것이다.⁹⁾

1982년 金正日은 혁명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다. 둘째,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셋째,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넷째,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¹⁰⁾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첫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둘째, 창조적

7) 고병철, “이데올로기와 북한의 대외정책”, 이흥구·스칼라피노 편, 「북한과 오늘 의 세계」(서울: 범문사, 1986), p. 21.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해설」(평양: 인문과학사, 1973), p. 5.

9) 탁진·김강일·박홍제, 「김정일지도자」, 제2부(동경: 동방사, 1984), pp. 12~22.

1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간」, (1982.3), pp. 9-37.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는 크게 나누어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 개조와 정치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¹¹⁾

사상에서의 주체는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의 자주는 나라의 혁명과 인민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모든 노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관철한다는 것이다. 경제에서의 자립이란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신의 힘으로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말하며, 국방에서의 자위란 나라의 자주성과 혁명의 전취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는 견고한 무장력을 갖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네가지 원칙들도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도 그것을 엄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김일성의 獨創에 의한 것도 아니다.¹²⁾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 있어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는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시켜 나가는 창조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¹³⁾ 여기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의 양대지주인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즉 자주적 입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어떻게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인가 하는 원칙적인 입장이라면, 창조적 입장은 인민대중이 어떻게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계

11) 김정일, 같은 글, pp. 37-71.

12)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문우사, 1988), p. 170.

13) 서대숙·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262.

되는 것이라고 한다.¹⁴⁾ 즉 양자의 관계는 원칙과 방법의 관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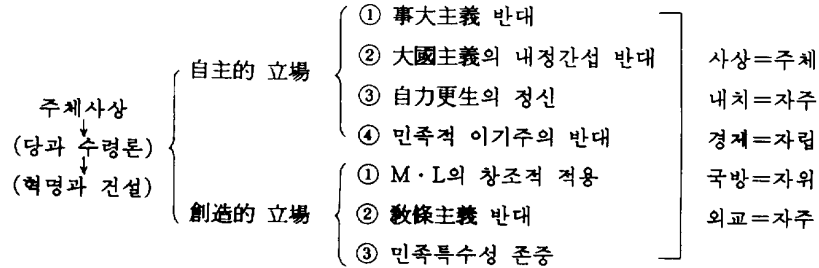
김일성은 당의 혁명적 영도는 인민대중을 당정책에 최대한 조직 동원한다는 자신의 領導方法을 제창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 매체에 의하면 김일성이 창시한 영도방법은 黨과 首領의 영도하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영도방법이라고 한다.¹⁵⁾ 또한 북한의 이론가인 황장엽은 “로동계급의 당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영도밑에 당과 대중의 조직, 사상적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전당과 전체 근로대중속에서 수령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수령의 지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강한 혁명적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¹⁶⁾는 것이다. 여기서 자주성과 창조성은 김일성의 영도를 따를 때만 발휘할 수 있으며 수령과 당밑에서 사상과 행동의 통일로 무한한 충성심과 자신감의 근원인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세력이 뭉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보다는 김일성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혁명이론 및 수령론으로 인민대중을 구속시키고 지배하는 계급독재논리이며 남한의 혁명세력을 북한사회주의건설에 접합시켜 남한에까지 주체사상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분명히 철학적 표현이 아니라 북한인민과 김일성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날 소련과 중국에 정치적으로 복종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던 때에 대한 반발로서 주체적이 되고자 하는 북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주체사상의 본질을 도표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
- 14)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8, p. 46에서 재인용.
 - 15) 고성준, 같은 글, p. 47에서 재인용.
 - 16) 같은 글, p. 50에서 재인용.
 - 17) 김갑철, “주체사상 총서”, 「국제정치논총」, 제30집 1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 p. 190.

〈표1〉 主體思想의 構造



2. 이데올로기적 機能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支配體制의 合理化기능, 政治社會化기능, 大衆動員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체사상은 (1) 마르크스-레닌주의 계통의 다른 이념과 같이 선전요소와 실천요소간의 모순을 지닌 二重構造를 가지며, (2) 개인의 지도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首領論에 의거하고 있으며, (3) 그 絕對性을 강조하여 폐쇄성과 경직성을 가진 특징이 있다.¹⁸⁾

따라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革命神話를 창조하고 역사를 날조해서라도 주체사상을 북한주민의 신념체제로 만들어 주민들의 단합과 동원을 보장해야만 했던 것이다.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1) 김일성체제의 正統性 확립, (2) 혁명과 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3) 자주외교노선의 기반구축 등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4)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全域의 공산화를 위한 대남혁명과 통일노선의 합리화에 있음이 분명한데 그 기능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정통성이란 정부의 권력행사의

18) 정천구, "북한(주체) 이데올로기의 성격과 변화전망," 이용필 외, 「북한의 통치 이념과 체제」(1988. 8), pp. 170-176.

기초로서 정부의 支配權에 의한 국민의 지배에 대한 동의¹⁹⁾라고 할 수 있는데 김일성정권은 소련군의 군사적 점령의 산물이었다고 처음부터 인민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출범시부터 정통성 기반이 빈약하였다. 때문에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기원을 1930년대의 抗日武裝 투쟁과정과 접합시켜 자신의 정권이 단순한 소련의 위성정권이 아니라 오랜 혁명의 과정속에서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수립된 정권임을 강조하고 이를 조선노동당 당규약전문에 명시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권력이 강화되는 후기에 올수록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1인독재 지배체제를 정당화하였다.²⁰⁾

따라서 북한공산당은 소위 혁명의 移植을 정당화하고 이식된 혁명이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革命神話造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혁명과 건설을 위한 大衆動員의 기능이다. 에치오니(Amitai Etzioni)는 動員이란 행동단위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집단행동에 이용하는 과정이며 동원의 개념은 私的-民間的(private-civilian) 목적으로부터 公的-軍事的(public-military) 목적으로 자원의 통제력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²¹⁾ 그러나 북한에서는 대중동원을 하는데 있어서 '行政的方法'이나 '物質的方法'보다 "정치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방법만이 참다운 혁명적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력갱생의 정신과 적극적 혁명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²²⁾ 따라서 주체사상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위해 필요한 대중동원 및 敎化의 규범적, 심리적 요소로 활용코자 했

19) Dolf Sternberger, "Legitimac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9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9), p. 244.

20) 고성준, 앞의 글, p. 53.

21)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A Theory of Social and Political Process* (New York: The Free of Glencoe, 1968), pp. 388-390.

22) 한용원, 「통일을 위한 북한 연구」(서울: 박영사, 1989), p. 62.

음이 분명하다. 특히 경제건설을 위한 노력경쟁운동²³⁾으로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 천리마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 대표적인 혁명적 군중노선으로 설정하였고 국방건설을 위해 '4대군사노선'²⁴⁾을 표방하였다.

셋째, 자주외교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구축의 기능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거해 대외관계에서 외세의 간섭없는 自主路線을 추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은 오늘날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세력과 지배주의 세력, 혁명역량과 반혁명역량과의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非同盟運動은 현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위력있는 反帝혁명역량”이라고 역설하여 주체사상을 ‘第三世界論化’ 함으로써 비동맹제국으로부터 외교적 승인을 획득하는 등 북한이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²⁵⁾ 따라서 북한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마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제3세계의 호응을 얻고자 했고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주체사상은 대남혁명과 통일노선의 합리화 기능을 한다. 주체사상은 통일전략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남한에서 혁명역량을 배양하고 혁명의 참모가 되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세워야 한다는 것, 노동자, 농민, 진보적인텔리 등을 총망라한 聯合전선의 필요성, 그리고 전 세계에서 反帝反美鬭爭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²⁶⁾ 즉, 북한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23) 노력경쟁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한총람」, pp. 970-980 참조.

24) 4대군사노선은 북한의 국방자위정책노선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행동요강이며 모든 분야를 우선하는 철저한 전쟁준비의 강행책으로 (1) 전 인민의 무장화 (2) 전 국토의 요새화 (3) 인민군의 간부화 (4) 군장비의 현대화 등이며 「김일성주의 원리」 제8장 「자위적 국방건설」에 의하면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으로 모든 군사문제를 주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규정한다. 「북한총람」, p. 1443 참조.

25) 박한식,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외정책”, 박재규 편, 「북한의 대외정책」(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pp. 77-99.

26) 고병철, 앞의 글, 앞의 책, p. 28.

사회주의 승리를 달성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통일전략의 목표로 삼고 있다.

1975년 10월 노동당 창당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일성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자간의 투쟁이며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침략세력간의 투쟁”²⁷⁾이라고 규정하여 주체사상을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민족적 이데올로기로 각색시킴으로써 남한의 민족주의 세력을 이용하려는 기도를 노골화 했다. 1956년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에서부터 1980년 제6차대회에 이르는 김일성의 사업총화보고와 그 밖의 다른 많은 글이나 연설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으며 이 과제들은 조선혁명의 구성부분과 과제로서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것으로 定式化되었다. 그리고 허종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을 분석해 보면 (1) 주한미군의 조기철수, (2) 민족적 자주식의 고취, (3) 주체사상의 정당성 및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인식, (4) 남한 집권층의 죄악인식, (5) 남한인민의 계급적 각성 고취²⁸⁾ 등으로 남한에 聯合의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한간의 민족정통성의 문제를 놓고 북한측이 유리한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27) 고성준, 앞의 글, p. 54에서 재인용.

28) 허종호, 앞의 책, pp. 229-240.

Ⅲ. 主體思想과 統一論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를 제기시킨 歷史的 根源을 한마디로 美軍의 남한점령에서 찾고 있으며 이에서 벗어나는 반제·반미투쟁의 승리와 남북한에 걸친 노동자·농민 지배의 프롤레타리아 공산사회건설에 중점을 둔 특이한 통일론으로 그것은 남북한에 갈라진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통일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통일의 기본원칙과 조국통일의 최종 목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론 및 북한의 통일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主體思想과 統一의 基本原則

가. 主體의 革命理論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원 대회 연설에서 조선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하는데 그동안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과오를 범했으며 조선의 혁명사업에 많은 해를 끼쳤다고 분석한 다음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첫째, 소련이나 중국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고 조선의 구체적 조건,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둘째,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 지리,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하며, 자기의 당사를 가지고 당원을 교양하여야 할 것을 제시했다. 김일성이 말하는 당사상사업이란 (1) 당의 지도이념의 정립 문제와 (2) 당원들에게 당이념을 교육 침투시키는 것이다.²⁹⁾ 그러나 김일성이 표방하는 당이론은 당의 지도보다 수령의 지도에 모든 것을 귀결시키고 있다. 또

29) 김갑철, 앞의 글, p.188.

한 1968년 7월 8일 김일성은 '조국통일과 남조선 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라는 교시에서 "조국통일은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단순한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혁명을 전제로 하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거족적인 사업입니다. 남조선 혁명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조선 혁명의 일부분으로서 조국통일과 남조선 혁명은 서로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집니다"³⁰⁾ 라고 하여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은 다같이 조선혁명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적인 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날카로운 투쟁입니다"³¹⁾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분단된 국가의 민족사회 구성원들이 다시 만나게 하는 민족통일이 아니고 남북한에 걸친 노동자, 농민계급을 해방하고 이들 이름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실시되는 계급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통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혁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다음에도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계속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가 이룩된 다음에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그들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시키고 낡은 사회의 구속에서도 해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3대혁명은 1990년 5월 2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 시정 연설에서도 재 천명하였다.

30) 「내외논총」, 제4집(서울: 내외정책연구소, 1982), pp. 118-119.

31) 허종호, 앞의 책, p. 186.

32) 「북한소사건」(월간중앙, 1월호 부록, 1991), p. 43.

“공화국 정부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한 우리 당의 총노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기본 전략적 목표인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고……사회주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실현하는 올바른 방도를 뚜렷이 밝혀줍니다.”³³⁾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통일노선을 주체의 혁명론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64년 2월 27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전원회의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세 가지 혁명력량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첫째는 북조선의 혁명력량, 둘째, 남조선 혁명력량, 셋째는 국제적 혁명력량³⁴⁾이라고 했다.

‘북조선혁명역량’은, 정치적역량, 경제적역량, 군사적역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군사적역량은 ‘4대군사노선’을 지침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남조선혁명역량’ 강화는 혁명의 주력군, 즉, 혁명에 동원될 수 있는 기본계급과 그 속에 깊이 뿌리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국제혁명역량’ 강화는 신생국가들, 중립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하며 이 나라 인민들에게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정당한 입장을 알려주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다³⁵⁾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자주적 접근방법을 모색하려 시도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방법을 김

33) 「로동신문」, 1990년 5월 25일자.

34) 「김일성 저작선집」, 4권, pp.77-80.

35) 같은 책, pp.82-87.

일성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한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킨 후에 어떠한 외국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선인민 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³⁶⁾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미군을 철수시킨 후 현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민주연합정부’ 형태의 인민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그들의 속셈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주체의 혁명이론이 밝힌 필연성에 대한 이해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하고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하의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그들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이론임을 알 수 있다.

나. 祖國統一의 原則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면서 3대 원칙과 5대방침을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채택시 합의된 통일의 3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³⁷⁾고 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70년대 이후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분단문제의 해결 및 통일방안에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으로 확고하게 관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조국통일 3대원칙 중 ‘자주적 원칙’이야말로 ‘근본입장이며 기본원칙’으로 외세 배격을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외세의 간섭없이 독자적인 핵을 이루면서 다른 원칙들의 성과적 실현의 결정적 조건이라고 한다. 이를 기초로 북한은 조국통일 3대원칙의 정당성을, 첫째, 그것이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데, 둘째, 인민의

36) 「북한의 사상」(서울: 태백, 1988), p. 295.

37) 「북한 총람」(서울: 북한연구소, 1985), pp. 1672-1673.

의사와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방침이라는 데, 셋째, 철저하게 반제반미적 입장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데³⁸⁾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의 정책이며 남한이 동의한 것이라는 믿음에서 대화를 진행시켰지만 남한에서 공동성명의 기본정책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자 김일성은 회담을 중지시켰고 이러한 통일의 3대원칙은 그들의 통일방안을 정당화하고 우리측의 통일방안을 분열방안으로 왜곡·비판하는 선전무기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 5월 24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통일의 3대원칙에 입각한 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온 민족의 슬기와 의지를 한데 모아 조국통일의 앞길을 뚜렷이 밝힌 위대한 통일강령입니다.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지 않고 공정하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입니다. ……공화국 정부와 전체조선인민은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³⁹⁾

이렇듯 그는 통일의 3대원칙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의 구실로 삼으면서 대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의 제안의 숨은 동기는 3대원칙을 구실로 남한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그들의 속셈을 파악할 수가 있다.

한편 김일성은 온 민족의 결박한 염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38) 「북한소사전」, pp. 172-173.

39) 「로동신문」, 1990년 5월 25일자.

위하여 조국통일 5개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마련으로 (1)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2) 남북한 군비축소와 미군의 단계적 철수, (3) 미·북한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1988년 11월 7일 제시한 '포괄적·평화방안'과 북한측의 '3자회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략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둘째, 분단장벽을 제거하고 남북자유왕래,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1) 남쪽인사의 방북을 환영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2) 북쪽 주민의 남쪽 방문도 적극 보장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 '콘크리트장벽 철거'와 보안법 등 악법폐지가 선행조치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의 개방과 교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위장하기 위한 전술적 언동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셋째,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1) 국제무대에서 대결을 지양하고 민족공동이익을 수호하자는 것과, (2) 미국이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하며, (3) 통일 실현 이전 단계라도 남북이 '하나의 의석'으로 유엔에 공동 가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미관계 개선의지를 시사한 것이며 유엔동시가임을 저지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로 보여진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데, (1) 당정·특정계급만을 위한 대화가 아닌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인사를 반영하는 전민족적 대화가 되어야 하며, (2) 중단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종래의 '연석회의' 또는 '정치협상회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며 당국끼리의 대화가 아닌 민중의 무질서한 대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국민이 대정부신뢰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중정치공작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남북,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각 계층 인사를 망라하는 통일전선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남혁명노선을 전개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민족통일을 계급적 이익에 우선하는 민족적 의무로 강조하면서 정치, 경제상황의 문제점

을 부각시켜 사회혼란에 주력 할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와같은 5개방침은 1990년 9월 5·6일 남북총리회담에서 북측은 先 정치-군사문제 해결, 後 교류라는 기본 틀에서 물러서지 않고 국제환경이 변하고 자유와 개방의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통일은 '우리 식'이어야만 한다는 제의나 불가침선언, 유엔동시가입의 저지⁴¹⁾ 등 남북쌍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조차 외면하는 즉 '2개조선 반대'의 기존논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당해 10월 17·8일 제2차 총리회담에서 북측은 단일의석 유엔가입,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방북관련 구속자 석방, 불가침선언 등 1차회담과 변화없는 군사문제를 선결과제로 들고 나와 남북관계개선을 외면했다.⁴²⁾ 또한 12월 12·3일 제3차 총리회담에서도 북측은 불가침선언 우선채택을 내세우며 정치-군사문제를 선결과제로 주장했다.⁴³⁾ 여기서 유엔 가입문제는 1991년 5월, 한국이 북방정책에 의해 중·소와 가까와 짐에 따라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한의 유엔가입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따라 북한의 명분은 약해졌다. 이는 북한도 유엔에 동시 또는 별도 가입해야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 단일의석 가입을 주장해 온 북한의 패배이며 따라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마디로 총리회담에서 밝힌 북한의 입장이나 유엔가입 문제의 제기는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동조하는 면을 보이면서도 이면에는 모든 남북대화가 북한식 통일논의 확산 및 대남통일전선형성의 일환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主體의 社會主義·共產主義建設論

김정일에 의해 간행된 주체사상 총서에 의하면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개조되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

⁴⁰⁾ 이동익, “현시점에서 본 북한의 통일전선”, 「공산권연구」 1990. 9월, pp. 33-36.

⁴¹⁾ 「조선일보」, 1990년 9월 6일자.

⁴²⁾ 「조선일보」, 1990년 10월 18일자.

⁴³⁾ 「조선일보」, 1990년 12월 13일자.

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⁴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제도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인민대중은 온갖 사회적 예측과 착취에서 중국적으로 해방되며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된다.”⁴⁵⁾고 하면서 공산주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은 공산주의사회는 그 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정도에 따라 두 개의 합법칙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하나는 공산주의 첫단계인 사회주의의 단계이며 둘째단계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이다⁴⁶⁾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바로 사회주의 혁명단계를 거쳐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 주체의 혁명이론에 일치되고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실현과정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산주의건설의 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모두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주체형의혁명가’는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⁴⁷⁾ 이는 한마디로 수령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자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기본무기인 노동계급의 국가정권의 가장 우월한 형태는 ‘인민정권’이며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통일전선에 나서는 혁명정권이고 인민정권의 본질적 특성은 광범한 대중적 기반에 의거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 것⁴⁸⁾이라고 한다. 이러한

44)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이론」(서울: 태백, 1989), p. 7.

45) 같은 책, p. 21.

46) 같은 책, pp. 49-50.

47) 같은 책, pp. 49-50.

48) 같은 책, p. 107.

원리는 바로 사회주의 국가정권이 가장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형태로서 인민정권을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방도로서 3대혁명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⁴⁹⁾라는 주장에서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라는 이름하에 주민들을 그들에게 복종하는 인간으로 개조해 나가고 있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간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3대혁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청산리방법' 등 스탈린주의식 社會動員體制(societal mobilization)를 강화하고 있다.⁵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 구호와 함께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⁵¹⁾ 라는 전략적 구호를 내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을 벌여나가는 대중운동화 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상개조운동이고 기술개조운동이며 문화개조운동인 것이다. 또한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현대적인 혁명지도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⁵²⁾라고 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질적 특징은 청산리방법을 구현하는 데 두고 있다. 이렇게 구체화된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小組는 당일군, 국가·경제기관일군, 대학생, 대학교원, 공장·기

49) 같은 책, p.110.

50) 김갑철, 앞의 글, p.209.

51)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론」, p.159.

52) 「김일성저작선집」, 8권, pp.141-142.

업의 기술자, 과학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單位小組는 지도대상에 따라 20~30명에서부터 50명에 이르기까지 조직되어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 중에서 특히 사상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중앙에서 직접 결성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했다.⁵³⁾ 이러한 소조운동의 기본목표는 한마디로 사상혁명에 있다. 즉 당원들과 노동자를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라 할 때 이는 곧 주체사상으로 사상개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3대혁명소조운동은 주체사상에 의한 강력한 동원 및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 무기로서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 무기이며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의 역사적 사명이다. 노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자면 당 안에 유일사상체계, 수령의 사상체계와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⁵⁴⁾는 것이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수령의 사상체계, 수령중심의 단결의 체계이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체계로 모든 것을 수령론에 입각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노동당은 수령의 정치적 도구이며 김일성의 私黨에 불과하며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권은 김일성 唯一思想體系에 의거한 노동당의 대행기관으로 전략했음을 인정하고 있다.⁵⁵⁾ 결국 '주체의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 이론'은 수령의 영도로 귀결된다.

위의 논리에서 주체의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 이론은 3대혁명역량 강화와 함께 모든 사회성원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 김일성 1인독재체제를 더욱 확

53) 「북한개요」(서울:국토통일원, 1986), p. 52.

54)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이론」, p. 180.

55) 김갑철, 앞의 글, p. 209.

고히 하고 나아가 북한을 혁명기지화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통일과는 상충되는 이론에 불과하다.

3. 主體思想과 統一觀

북한의 통일정책은 “남조선은 외국군의 강점하에 있고 경제는 식민지 예속경제로서 모든 이윤을 착취당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식민지상태의 남한관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에서 비롯된 통일논리의 조작이라는 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북한체제가 ‘남조선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을 기만, 통제, 동원하고 내핍을 강요하여 장기독재를 지탱하기 위한 대내통치 명분이 되어 왔다⁵⁶⁾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남조선혁명은 남조선 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어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⁵⁷⁾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관은 미제에 의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남한에 대한 신식민지관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은 이미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취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인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완전히 해방시켰으나 남한의 인민대중은 아직도 ‘미제’와 이의 지원을 받는 ‘반동부르조아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것은 이들 세력의 탄압으로부터 남한의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⁵⁸⁾ 이와같이 주체사상에서 보는 남조선해방이라는 정치적 상징은 북한의 만든 정책, 전략을 합리화시켜 주는 수단이 되었다.

56) 「민주통일론」(서울: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p. 75.

57) 허중호, 앞의 책, pp. 4-5.

58) 최완규,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정책”,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통권 제9호, 1991년봄, p. 50.

1991년 5월 평양 IPU회의에 참가했던 국회의원들이 5월 5일 MBC 특별좌담에서도 북한의 국민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제를 몰아내고, 콘크리트장벽을 허물고, 방북관련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등 통일에 대한 열기를 주민들에 한층 더 부상시키고 있는 것 처럼 보이고 있다는 데 이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조직화된 체계속에서 획일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통일정책의 합리화를 꾀하고 대내외 선전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체사상에 투영된 북한의 통일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남조선 해방'이며 그 해방의 시기면에서 통일을 일시해결의 '躁急論'으로 일관되고 있다. 즉 북한은 '우리 세대의 통일론'이라는 급진성을 띄고 있는 점이 특징인 것이다. 1967년 12월 16일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은 "정부가 당면한 초미의 관심사는 남조선의 혁명세력을 지원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남조선의 해방을 이루는 것이며 어떠한 야만적 폭압도 혁명가들의 불굴의 정신을 꺾지 못할 것이다"⁵⁹⁾라고 역설했으며 '1960년대 해방론', '1970년대 해방론' 등을 내세워 전쟁준비에 주력해왔을 뿐 아니라 남북대화석상에서 한국의 '실현 가능한 문제로부터의 점진적 해결'을 거부하고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 '통일문제의 일괄타결론' 등을 앞세우고 있는 점⁶⁰⁾도 북한의 조기통일노선 기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통일론은 분단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일 뿐이며 민족자해의 무력통일론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아직도 남한 내에서 민주화의 진통과정에서 겪고 있는 정통성 시비, 이데올로기논쟁, 노사분규, 계층간의 갈등, 반미감정 등을 남조선해방의 시기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통일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환반도적 혁명의 전지에서 규정되는 남한혁명의 성격이라는 차원에서 나타

59) 서대숙 저·서주석 역, 앞의 책, p.200.

60) 「북한총람」, p.1600.

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

(2) 이러한 혁명적 목표를 달성할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전선, 지역혁명론

(3)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 시기면에서 조급론(수행방도라는 차원에서는 평화적, 비평화적전도)

(4) 통일방안과 관련된 차원에서 연방제 통일방안

(5) 이러한 통일정책에 이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재반정책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군축주장⁶¹⁾ 등이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4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결국 북한의 통일관은 전한반도적 차원에서 혁명의 종국적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으나 북한의 국내의 어려운 경제적사정과 김일성의 노쇠, 그리고 세계정세의 변화 등으로 '하나의 조선'을 위한 조기통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는 내리기 쉽지 않다.



61) 윤필, "북한통일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 「政正」, 제3집, 전국대학교 대학원, 1990, pp. 211-212.

IV. 主體思想과 統一政策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은 김일성 주체의 혁명론에 의한 최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전략·전술로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계급해방)과 미군철수 및 현정권의 타도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앞에서 논의된 논리를 바탕으로 통일의 방법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전술, 그리고 통일의 최상의 방안이라고 일컫는 고려 민주연방제를 주체사상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統一의 두 가지 前途

김일성은 “우리 혁명에는 두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 되는 것이 하나의 전도요, 큰 전쟁으로 인하여 제국주의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조건하에서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전도입니다.”⁶²⁾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평화적 통일이란 남과 북사이의 신뢰와 전민족단합에 기초하여 전쟁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전쟁에 의하여 이루는 통일이란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말하는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조선 당국이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접수하고 실현되는 경우다. 김일성은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념원에 맞게 평화적 조국

62) 「김일성저작선집」, 1권, p. 573.

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⁶³⁾라고 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은 조국을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일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 정부가 통일에 관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남조선에 반제자주적인 정권이 서거나 남조선이 중립화되는 경우(즉, 남한이 容共化되는 경우)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이 굳게 단결하여 강력한 반파쇼민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전 남조선적인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인다면 진보적인 세력에 의하여 반제자주적인 민주연합정부를 세울 수 있으며 국제·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조선이 중립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남조선에서 외세의존정책이 포기되고 남조선과 미·일제국주의자들간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들은 무효로 선포될 것이며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면 자주성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고 남조선 혁명세력에 의해 그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이룩된다는 것이다.⁶⁴⁾

셋째, 남조선에서 혁명역량이 강력하게 꾸려지고 남조선혁명이 승리한 후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과 남조선의 애국민주역량과의 전략적 배합에 의한 통일이다.⁶⁵⁾ 이것은 전조선 지역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결과로 세워지는 정권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은 장시일을 요하는 간고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국제적으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역량이 더욱 강화되면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⁶⁶⁾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바로 앞장에서 논의된 3대혁명역량강화와 평화적통일을 관련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평화”는 남한에서 미군철수(민족

63) 「김일성저작선집」, 6권, p. 452.

64) 허중호, 앞의 책, pp. 265-266.

65) 같은 책, p. 266.

66) 「김일성 저작선집」, 1권, pp. 575-576.

해방)와 인민민주정권수립(계급해방)이 완수된 상태이며 동시에 남한의 인민민주정권과 북한정권의 합작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을 '평화통일'이라고 함으로써 평화를 이념적, 평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⁶⁷⁾ 따라서 조국통일의 평화적 전도는 평화적 가능성의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들의 혁명역량이 압도적인 우세한 조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혁명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반대로 그들은 통일의 비평화적 전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하게 될 때 그들을 맞받아 싸운다는 것으로 김일성은 "전쟁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미국놈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무력으로 침략자들을 몰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미국놈들은 남북조선 전체인민의 무장반격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⁶⁸⁾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전쟁을 반대하여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적들이 무력으로 침략할 때는 언제나 미제를 이땅에서 소멸시키고 남조선 해방을 위해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미제의 침략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미제를 내쫓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제침략세력이 약화될 수 있는 계기'로 상정하고 있는 경우를 (1) 미제가 세계적 범위에서 큰 전쟁을 도발하여 역량을 분산하지 않을 수 없을 때, (2) 제국주의 상호간 모순에 의하여 미제가 전쟁에 휘말려 남조선을 돌볼사이가 없게 되었을 때, (3) 미제가 세계혁명적 인민들이 끊임없는 반제

67) 평화는 통일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에서 동태적·다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사전적으로는 '평화'를 전쟁이 없으며 동시에 소규모의 무력도 없는 상태이며 아울러 한반도의 상황에 따라 여기에 추가하여 상호비방 또는 적대적인 심리전도 중지된 상태까지를 평화로 규정할 수 있다. 즉, 평화는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통일의 과정에서 모든 절차의 기초를 이루며 통일을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세기, "남북통일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방안", 「민족통일」 1990.9·10월호, pp. 18-19참조.

68) 「김일성 저작선집」, 4권, p. 146.

투쟁에 의하여 도처에서 쫓겨 도망갈 때⁶⁹⁾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타 지역에서의 전쟁발발로 미국의 힘이 분산되어 對韓지원이 약화되거나 남한에서 반미운동이 확산되어 미군이 현저하게 감축되거나. 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에, 조선전선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때를 이용하여 전면 남침을 결행하겠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세째, 남조선에서 혁명정세가 성숙되고 남조선인민들이 결정적인 투쟁에 떨쳐나서 북반부형제들의 지원을 요구할 때 우리의 지원에 의하여 남북혁명역량의 전략적 배합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어 통일이 실현된다는 것이다.⁷⁰⁾ 또한 김일성은 모든 근로자들이 전쟁에 대한 혁명적각오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공산주의자로서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어느때든지 한번은 꼭 그놈들과 해방전쟁을 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⁷¹⁾ 라고 언급하면서 제국해방을 위한 전쟁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방법론에 있어서 정세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평화수단에 의한 통일에 두고 있지만 ‘방어전쟁’⁷²⁾의 성격을 갖는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정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통일의 두 가지 前途를 요약해 보면 평화적 통일은 남한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했을 때, 곧 공산당의 영도하에 反美·聯共세력이 집권했을 때를 뜻한다. 비평화적 통일은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무력통일을 의미하고

69) 허종호, 앞의 책, pp. 268-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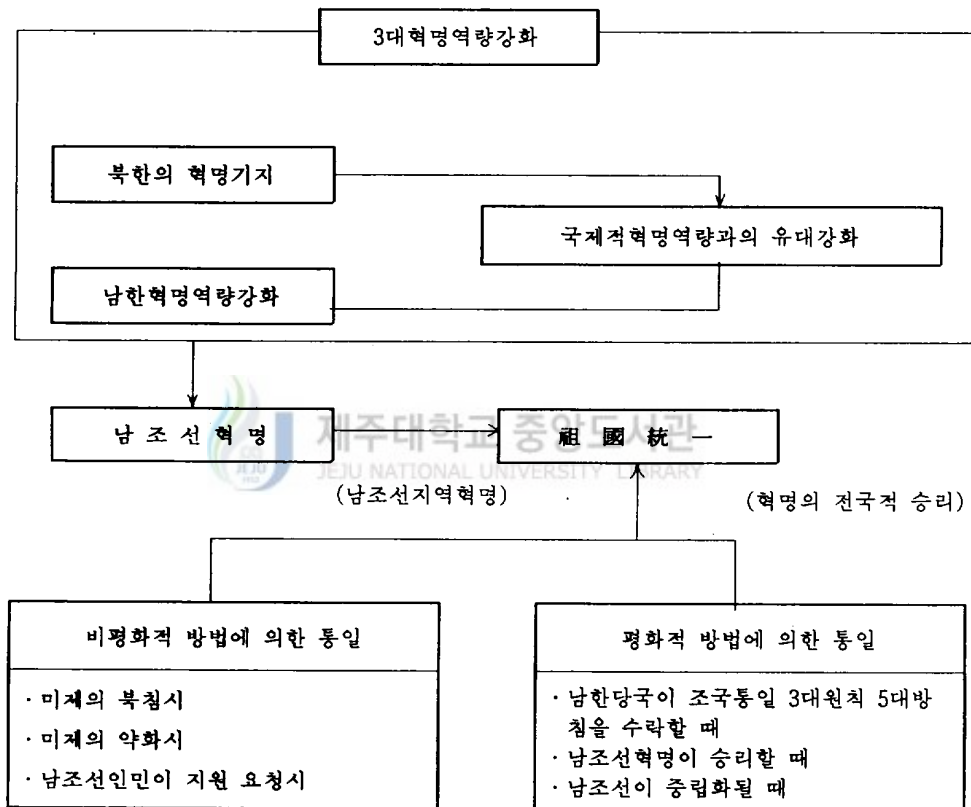
70) 같은 책, p. 269.

71) 「김일성 저작선집」, 4권, p. 484.

72) 북한에서 말하는 전쟁에는 ‘부정의 전쟁’과 ‘정의의 전쟁’이 있다. 이때 ‘정의의 전쟁’을 여기서는 ‘방어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 즉 자기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과 제국해방을 위한 혁명전쟁과 같은 적들이 무력으로 우리를 침략할 때는 침략자들에게 반대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 곧 ‘정의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다. 윤환, 앞의 글, 앞의 책, p. 243. 참조.

있다.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의 두 가지 전도, 즉 조국통일(즉 共產化)이라는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유도하거나 맞이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해방직후의 '民主基地建設路線'이며 1960년대에 체제화된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이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즉 남과 북의 두 지역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은 결국 3대혁명역량이 준비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러한 노선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⁷³⁾

〈표2〉 혁명적 통일론의 기본구도



73) 김갑철, "북한의 조국통일정책과 논리," 김갑철 공편, 「북한학개론」(서울: 문우사, 1990), pp. 413-414.

〈표3〉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과의 관계

구 분	남 조 선 혁 명	조 국 통 일
순 서	先	後
방 법	미제축출 → 민족해방 → 현체제타도 → 인민정권수립 (폭력방법) (계급해방)	남북 인민정권의 합작 통일 (평화적 통일)
포괄지역	남한지역 (지역혁명)	남북한 전역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
추진세력 (혁명주력)	남한의 혁명역량 (보조역량: 북한의 혁명역량)	북한의 혁명역량 (보조역량: 남한의 혁명역량)

2. 人民民主主義革命의 戰略·戰術

가. 人民民主主義革命의 등장과 性格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1930년대초 스탈린에 의해 작성되고, 소련에 의해 수출된 공산주의혁명의 변형된 유형으로서 시초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명명되어 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 후 소련점령군의 힘의 배경하에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하는 실천적 단계에서 수정 보충되어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체계로 정립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이같은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창시한 독창적인 혁명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⁷⁴⁾ 이와같이 새로운 이론인 양 미화

74) 「북한총람」, p. 1609.

하고 있는 것은 대남적화 혁명노선의 정당화 내지 김일성우상화의 한 측면에 불과하며 그 연장선에서 김일성은 남한을 침공하였으며 이것이 한국전쟁의 시작이었다. 그 당시 그의 정책은 무력에 의해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북한 주민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제국주의로부터 남한 인민을 해방시켜야 할 임무가 남아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통일정책은 민족해방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만 지난 40여년 동안 조국을 통일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⁷⁵⁾ 그것은 김일성 자신이 통일에 대한 강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두려움 속에서 점차 자신이 없었음인지도 모른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표방하기 시작했는데 1970년 11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와 그들의 파쇼적 지배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⁷⁶⁾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해방이론(NL)과 같이 ‘조국통일의 개념을 미제에 의한 남반부 강점’ 즉 분단에서 비롯된 민족해방론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며 통일을 조선혁명의 완성이라는 ‘계속혁명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점에서 남한의 민족해방론과 일치하고 있다.⁷⁷⁾ 따라서 남반부의 인민대중의 해방이 곧 통일목표가 되며 미국은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이 남한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1) 해방후 미군이 남한점령으로 조국이 분단되었다는 점, (2) 남한은 미국의 新植民地政策으로 인하여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었다는 점, (3) 미국은 남한을 전조선을

75) 서대숙, “1990년대의 북한”, 국제학술회의 논문, 「주간이데아」, 제1권 제20호, 통권 제20호(서울: 민주문화 아카데미, 1990), p. 38.

76) 「북한전서」(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0), p. 723.

77) 이원웅, “주체사상의 통일론과 민족해방(NL)론의 통일이론”,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통권 제9호, 1991년 봄, p. 278.

강점키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 있다는 점, (4) 전조선의 민주발전과 조국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⁷⁸⁾고 보는 정세평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관한 북한의 해설을 보면 본 혁명노선의 성격은 한마디로 '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인민민주주의제도(사회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한 리론'으로서 (1) 식민지, 반식민지, 신생국을 혁명의 주대상국으로 삼고, (2) 광범한 노동계급(인민)을 혁명주도세력으로 하며, (3) 사회주의에 곧바로 가는 혁명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제국주의를 구축하는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적 압제를 타도하는 계급해방의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명⁷⁹⁾임을 주장하고 혁명의 성격은 매계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⁸⁰⁾는 관점에서 볼 때 종전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용어를 달리했으나 혁명내용의 본질은 다를바 없다.

북한은 1968년 10월 방송해설을 통해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은 남조선에서의 혁명을 전제로 하는 통일로써,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 자체내의 모순에 의해서 생길 것이며 그것을 완수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 자신에 달려있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은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로 대치할 수 없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북반부 인민들이 대신하여 수행할 수 없다. …… 남조선혁명이 따로 제기되는 만큼 그것을 조국통일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⁸¹⁾고 하여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남한 내부의 모순에 의한 갈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논리는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구조를 '식민지,

78) 허종호, 앞의 책, pp.13-18.

79) 같은 책, pp.38-43.

80) 같은 책, p.35.

81) 「북한전서」, p.724.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을 혁명 유발의 動因으로 보고 이른바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한국내부의 矛盾을 해결하기 위한 남한인민들의 혁명투쟁이라고 하는 것이다.⁸²⁾

그러므로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논리적 측면에서는 정상적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한 후진국(식민지·반식민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수 없는 주·객관적 조건을 배경으로 '민족해방·계급해방혁명'을 이행하려는 공산화혁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판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남한내 자체 혁명을 가장, 폭력 및 무력의 배합을 통해 적화혁명을 수행하려는 전략기도이다.⁸³⁾ 따라서 북한이 남한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전략은 미군철수 후 반공정권타도 및 인민정권수립, 그리고 북한정권과의 합작통일 순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나. 主力軍·補助力量의 編成과 鬭爭方法

북한의 혁명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으로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남조선에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문제를 혁명투쟁에서 기본전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적군대인 주력군을 형성하고 주력군을 지원하는 보조역량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명의 주력군이란 "혁명에 동원될 수 있는 기본계급과 그 속에 깊이 뿌리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의미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령도 밑에 사회의 기본계급인 노동자, 농민이 동원되어야만 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⁸⁴⁾ 그리고,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인 노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것"⁸⁵⁾이라고 하여 주력군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82) 「북한총람」, p. 1609.

83) 「북한총람」, p. 1610.

84) 허중호, 앞의 책, p. 83.

85) 같은 책, pp. 87-88.

으로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 세우는 것이다. 남조선의 인텔리들과, 청년학생들, 도시의 소시민들과 량심적인 민족부르조아지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 군중은 통일전선에 망라되어야 한다.”⁸⁶⁾ 또한 “각계각층 군중은 혁명의 주력군으로 될 수 없으나, 노동자, 농민과 힘을 합할 때에는 적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보조력량으로 된다”⁸⁷⁾ 라고 하면서 혁명의 주력군은 혁명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보조역량)으로 결속시키는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면 ‘群衆團體’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⁸⁸⁾고 하는데,

첫째, 광범한 군중을 망라해야 한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속에 흡수해야만 黨과 대중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반혁명세력을 孤立시키고 더 나아가 반혁명세력의 대중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급적 이익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적 조직이어야 한다. 군중이 공통된 이해관계에 의하여 조직되고 동일한 공통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 자신의 민주주의적 조직이어야 한다.

셋째, 원칙상 合法的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조직이어야 많은 군중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는 남한내의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아 새로운 군중단체를 조직하기는 곤란하므로 같은 계급의 조직을 하되 군중의 정치적 견해와 준비정도에 따라 혹은 慣習과 文化水準에 따라 정치·경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動力(즉, 주력군 및 보조역량)은 정치·경제

86) 같은 책, p. 89.

87) 같은 책, p. 85.

88) 같은 책, pp. 99-101.

투쟁, 합법·비합법투쟁,⁸⁹⁾ 폭력·비폭력투쟁, 대·소규모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옹호·지원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투쟁형태가 어떻든간에 그것들은 모두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준비로 되어야 하며 그 결정적투쟁은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하여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⁹⁰⁾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운동의 역사적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줬으며 혁명적 폭력없이 그 어떤 평화적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적 및 계급적 연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⁹¹⁾고 하여 남조선혁명은 오직 전인민적무장투쟁 등 폭력지상주의 관점을 확립해 놓고 있다.

다. 革命的 戰略·戰術의 時期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혁명의 전략적 단계에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혁명의 한 전략적 단계에는 혁명을 준비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準備期’와 원수들의 마지막 아성을 짓부시는 ‘決定的 時期’의 두 전략시기로 나누고 있다. 혁명의 준비기는, “암초를 에돌고 필요없는 회생을 피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간고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핵심을 키우고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장성시키며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⁹²⁾라는 기본방침을

89) 합법투쟁은 반동적 지배계급이 만들어 놓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수들을 반대하여 벌이는 투쟁이며, 비합법적 투쟁은 그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거나 법에 대립하여 원수들을 반대하여 진행되는 투쟁이라고 말한다. 윤희, 앞의 글, 앞의 책, p. 247 각주 참조.

90) 「김일성저작선집」, 5권, p. 194.

91) 허중호, 앞의 책, p. 125.

92) 북한의 전략에서 기본틀(frame)로 삼고 있는 것은 레닌의 전략론이다. 레닌의 전략은 ‘혁명의 일정한 단계에서 주된 공격방향’으로 보고 있으며 전략의 네가지 기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단 혁명정세가 조성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지체없이 반동 통치를 짓부시는 결정적 투쟁에 일떠서야 한다⁹³⁾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북한은 소위 결정적 시기의 선택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를 거치는 한 단계의 전략적 단계 다음에는 또 다른 차원의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북한의 대남공산화전략에 따른 제1단계는 전체적으로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준비기를 거쳐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휴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혁명전략 시행은 아직도 제1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준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⁹⁴⁾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혁명정세의 판단과 시기선택문제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 조건의 하나로 보고 결정적 시기선택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⁹⁵⁾

첫째, 혁명의 주·객관적 정세를 옳게 판단하는 일이다. 현 정세를 전면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승리의 객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타산하여야 하며 혁명력량과 함께 반혁명력량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객관적 조건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하여 표현되는 사회·경제적 조건, 반동통치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모순관계,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인민대중의 자연발생적 진출과 지배계층의 부패, 타락 및 위기 등이 정세평가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그리고 혁명의 주관적 조건은 노동계급의 수령과 당의 영도능력과 이에 뭉친 인민대중의 혁명적 능력

본요소는 (1) 전략목표의 선정, (2) 주력군과 보조군의 선정, (3) 主攻方向의 결정, (4) 힘의 배분계획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The Foundations of Leninism", by Joseph Stalin, in Arther P. Mendel, ed, *Essential works of Marxism* (New York: Bantam Books, 1965), pp. 205-296. 엄수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대남전략,"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1984, p. 37 참조.

93) 허중호, 앞의 책, pp. 127-128.

94) 엄수현, 앞의 글, p. 36.

95) 허중호, 앞의 책, pp. 174-178.

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인민대중의 혁명각오능력, 당의 영도능력, 조직성 등이 정세판단의 기준으로 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혁명정세발전의 결정적 요인인 객관적 요인과 객관적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는 능동적 요소인 주관적 요인을 잘 分析함으로써만 전반적 정세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敵我의 역량관계를 정확히 打算하는 일이다. 미제가 손쓸사이 없이 정권을 빼앗아야 할 전략적 특성 때문에 적에 대한 혁명력량이 압도적 우세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의 혁명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전략전술적 우세, 정치·경제적 역량과 함께 무장력의 준비정도와 그 확대 능력, 국제적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적의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1) 적의 내부모순과 약점의 증대, (2) 국내 또는 국제적인 원수들의 고립상태, (3)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의 변화와 전략전술에서의 약점 등을 비교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총체적 힘이 한국보다 월등히 우세한 조건에서 국내의 정세가 극도로 혼란할때 북한의 무장력을 동원하여 적화혁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가 확정된 다음의 行動方針은 혁명정세 성숙 즉시 반혁명에 대한 총공격을 조직하여야 하며 정치적 시위, 무장폭동을 결합한 총공격적으로 원수들의 牙城을 짓부셔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동원되는 혁명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북한의 군사력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남한자체의 혁명'임을 표방한 북한기치 하의 적화통일전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⁹⁶⁾

96) 이명영, 「통일의 조건」 (서울: 종로서적, 1989), pp. 106-107.

〈표4〉 人民民主主義革命論의 分析

구 분	내 용
基本思想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전략목표	반미·반자본주의 혁명을 통한 남북통일
전략수단	都市暴動, 武裝民衆蜂起, 內戰을 통한 혁명완수
주체역량	民衆(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先鋒隊	학생
통일전선	좌경종교인, 지식인, 정당인, 국회의원
表現團體	합법, 비합법적 민중운동 단체

위의 표에서 전략목표인 반미, 반자본주의혁명을 통한 남북통일이란 미군의 철수와 남한체제의 打倒를 통한 남북통일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선은 1955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김일성의 소위 4월 테제(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이래, 전략수단은 1962년 12월에 채택된 4대군사노선과 1974년 2월에 결정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에서 명백해 졌다. 더우기 1980년의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의 당규약전문에서 더욱 확고하게 선언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始終一貫 견지해 오고 있는 노선이다.

3.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

가. 聯邦制의 提案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걸쳐 한국의 불안한 정치정세에 비하여 북한은 경제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경쟁에 앞선듯이 보였으며 권력 내부도 안정되었다. 이

러한 상황아래서 북한은 당시의 대남정세를 혁명을 위한 滿潮期로 판단하고 이른바 통일문제를 앞세운 평화공세를 강화하기에 이르렀으며 공산주의 혁명전략의 핵심인 통일전선에서 생각할 때 '合作戰術'로서 제안된 것이 바로 남북연방제이며 그 내용을 보면 기존 통일정책과 별차이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남북연방제를 최초로 공개 제의한 것은 1960년 8월 14일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에서 이다.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의 실시는 비록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연합정부가 못되어서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는 못하더라도 이 연방의 최고민족위원회에서 전 민족에 이로운 경제·문화적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교류와 상호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 있다.”⁹⁷⁾

김일성은 단계론적 통일안을 제시하면서 ‘남북조선의 연방’을 통일로 가는 ‘과도적인 대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라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은 196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연방제안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연방제 밑에서 북남은 서로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북남조선은 각각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할 것이고 오직 연방 기구를 통해 합의에 이른 민족공동의 이해에 관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것입니다.”⁹⁸⁾

97) Soon Sung Cho, “The Politic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1950-1965”, *World Politics*, Vol. XIV, No.2, (January 1967), pp.233-234.

98) 김학준, “정치적 통합 방안으로서의 연방제: 북한이 제의한 연방제 통일안의 분석,”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서울: 박영사, 1988), p.245에서 재인용.

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제를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연관지으고 있으나 그것은 그가 '國家聯合案'⁹⁹⁾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남북대화가 단절되면서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고려연방제'로 체제화하고 대외선전을 강화하면서 남북대화 및 교류 중단에 책임을 서울정부에 전가시키기 위한 외교 전술에 통일문제를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73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총비서 후사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남북연방제 실시를 다시 재의했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방국가의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위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高麗'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며... 고려연방공화국은 나라의 분열을 막고 북과 남사이의 연계 협력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 놓게 된다.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연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¹⁰⁰⁾

이상의 내용에서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1)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조치

99) 「연방」이라는 용어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할 때 차이가 나며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표기할 때는 「연방」을 'Federation'이 아니라 국가연합이 뜻이 담긴 'Confederation'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연방」「국가연합」「단일국가」등 국가 구성 형식에 관한 일반이론은 IVO D. Duchacek, Power Maps: Comparative Politics of Constitutions (Santa Babara: American Bibliographical Center- Clio Press, 1973), Chap. 4. 김학준, 같은 글, 이상우, 같은 책, pp. 234-238 참조.

100) 허중호, 앞의 책, pp. 252-257.

로, (2) 현존하는 남북의 상이한 정치제도의 존속을 인정하고, (3) 남북의 두 정부가 각각 독자적인 정부활동을 계속하면서, (4) 두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로 하나의 조정기관을 만들어, (5) 이 조정기관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조치를 하나 하나 강구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통일에 접근해 가자는 것이다.¹⁰¹⁾

이와같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여러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모호성, 실현성보다는 선전목적의 시정방침 등에 치중한 점, 그리고 한국에 대해 부당한 선행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그 최종목표가 특정계급 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의 실현이라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족의 통일방안으로서의 논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¹⁰²⁾ 이와 함께 북한은 이른바 '조국통일 5대강령'¹⁰³⁾이란 것을 발표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미군철수를 포함한 군사문제 선결과 聯邦合作을 전제조건으로 내놓았다. 이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대화의 진전에 전혀 성의가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연방제는 하나의 선전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결국 북한은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연방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구체화되어 연방제 실시 그 자체를 최종 통일형태로 간주하게 되었지만 남북한의 현재도를 유지하면서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민족공동관심사를 처리하자는 것으로서 연방이라기 보다는 국가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1) 「분단현실과 통일논리」 (서울: 자유평론사, 1988), p. 36.

102) 정천구, 앞의 글, 앞의 책, p. 69.

103) 조국통일 5대강령은 197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제시한 허담의 '8개항통일방안'을 김일성이 1973년 6월 23일 체코 공산당총비서 후사크 환영대회에서 (1) 군사문제해결 (2)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3) 대민족회의 (4) 고려연방제 (5) 단일국호 유엔가입 등을 골자로 하여 재의한 것인데 앞에서 논의된 통일의 기본원칙(5대방침)과 다른 것이 없다. 「북한총람」, pp. 1677-1678 참조.

나.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內容과 問題點

북한은 여러차례 주장하고 정치상황에 따라 세부내용이 바뀌어 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다듬어서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로 공식 천명하였다. 즉 1970년대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조치로서의 연방제라고 하였지만 1980년대에는 '統一의 完結형태'¹⁰⁴⁾라고 선전하는 점과 비교적 체계화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은 기본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연방정부의 형태 및 운영원칙,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논리의 허구성을 內包하고 있다. 우선 선결조건으로서

첫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쇼정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해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야 한다.

셋째, 이와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공산당포함)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인민(반체제, 반정부인사)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해야 한다.

넷째, 조선과 미국사이에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미국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하며,

104) 조지훈,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p. 29.

다섯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개조선' 조작 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끝내야 한다¹⁰⁵⁾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결조건' 자체가 평화통일방안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을 잃은 것이다. '연방제'라는 국가형태도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의 자유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으며 반민족, 반민주, 반평화적 통일논의¹⁰⁶⁾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한의 정부가 북한이 인정하는 '민주정권'이라는 친공정권으로 바뀌어야만 비로서 통일이 가능하다는 논리의 허구성, 기만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연방제의 구성 및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앞의 선결조건과는 二律背反되는 연방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地域自治制를 실시한다.

셋째,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연방정부기구)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한다.

넷째, 연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이 공통된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¹⁰⁷⁾으로 한다는 것이다.

105) 「남북한 통일정책비교」(서울: 국토통일원, 1990), pp. 75-76.

106) 조지훈, 앞의 글, p. 31.

107)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p. 77.

이러한 구성원칙은 선결조건에서 남한의 사상, 제도,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남한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구성원칙에서는 남북한의 현존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남한에 북한과 같은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비로서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논리의 허구성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불력에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聯邦機構를 통해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이 단결과 협력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樹立된 후 시행할 정책으로서 이른바 '10대 施政方針'을 내놓았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⁸⁾

- (1) 국가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自主政策 실시
- (2) 全地域, 全社會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 (3)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경제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킨다.
- (4)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시하여 민족문화의 전통과 민족교육을 발전시킨다.
- (5) 북과 남이 교통, 체신을 연결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로운 교통, 체신을 활용한다.
- (6)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전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를 집중적으로 증진시킨다.
- (7) 북과 남이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民族聯合軍을 조직하여 외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
- (8) 海外同胞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
- (9) 통일 이전의 對外關係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108) 같은 책, pp. 78-79.

로 조정

(10) 통일국가로서 友好的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실시

이러한 '10대 시정방침'은 통일후에 교류, 협력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위와같은 방침은 연방제 실현이후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며 민족의 통일 단합을 위해서는 연방제와 무관하게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은 북한 관리들에 의해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방안'이라고 옹호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안은 (1) 남북한체제간 격차의 확대, (2) 남북통일에 대한 한국민이 高揚되어 가는 열망, (3) 국제환경의 지속전인 변화, 특히 강대국 간의 격화된 세력투쟁과, 국가 독립과 주권에 대한 전세계 사람들이 점증하는 요구를 포함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에서 '한 국가-자율적인 두 지역'이라는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⁰⁹⁾

이처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외형상으로는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남조선혁명에 의한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가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성요건면에서 몇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방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¹¹⁰⁾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들은 통일 및 대화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남한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에 맞는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연방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즉 남한의 현정권이 퇴진하고 '인민민주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남조선혁명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연방제 구성원칙에서 말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서로 용납'한다는 원칙

109) 김영환, 「남북한 비교정치론」(서울: 문맥사, 1988), p. 305.

110) 이하의 논의는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pp. 80-82 참조.

도 선결조건에 충족된 상태에서 남쪽의 인민민주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 사이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공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속임수는 마치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전제로 하는 통일방안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셋째, 북한은 '10대시정방침'을 연방제로 통일된 이후에 실시할 시정방침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주장하는 통일의 3대원칙의 하나인 민족대단결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남북이 통일하기 위해서 교류·협력·단결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는 통일의 순서가 도치된 함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통일국가의 국호와 국가형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족성원들의 의사나 상대방 대표들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있다.

다섯째, '연방'이라는 용어의 2중성을 입증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했지만 국문으로는 '연방'으로 표기하고 내용면에서는 연방정부가 군사권, 외교권을 포함한 대외주권을 행사하는 연방형 통합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략목표의 은폐성, 선결조건과 원칙사이의 모순성, 순서상의 전후도치성, 주장의 일방성, 용어의 개념 표현상의 2중성을 안고 있는 비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의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이러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북한은 남한내에 북한체제에 순종하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안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¹¹¹⁾

111) 신정현,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개와 목표", 신정현편,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274.

〈표5〉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 비교

시기 내용	1960년	1973년	1980년
국 호		고려연방공화국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조 직	최고민족위원회	대민족회의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 상설 위원회)
구 성	남북동수의 대표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 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	남북 동수의 대표와 해 외 동포 대표
기 능	남북의 경제문화 발전 을 통일적으로 조절 (구체적인 임무와 역 할은 쌍방 합의에 의 함)	남북의 연계와 합작 실현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이 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 실시 (10대 시정 방침)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¹¹²⁾에서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도로서” 그것이 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고 하였다. 과거의 연방제 통일이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된 적화통일로 가는 과도적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만, 80년 이후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란 북한의 외적변화에 선전효과를 노리면서 그들의 폐쇄정책을 은폐하고 분단을 영구히 존속시키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

어떤 통일방안이든 그 방안은 우리 민족의 염원에, 또는 현실에 맞게 실현가능한지를 타당성, 논리성, 실현가능성의 기준에 비춰 볼 필요가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타당성에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으며 그 성격이나 목표가 불명료하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논리성에서 보면 연방과 연합의 개념이 애매하며 조직상의 불합리를 내포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에서 남북이 상이한 이념과 제도를

112) 「내외통신」, 제725호(1991. 1. 4)에 실린 김일성 신년사 참조.

가지고 서로 불신의 상태에서 대치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런지 의문시되어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¹¹³⁾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방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에 주체사상의 기초위에 공산화 통일을 한다는 전략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113) 신정현, 앞의 글, 앞의 책, pp. 275-277 참조.

V. 結論：要約 및 展望

주체사상은 북한의 유일, 최고, 무오류의 신성불가침한 國定이데올로기로 절대화 되었으며 모든 진리의 원천으로 신비화되고 수령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북한의 대내외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기에 통일정책 역시 주체사상에서 그 논리와 방법이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북한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그들의 궁극적인 통일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일문제를 방법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로 구분하여 '先 혁명 後 통일'의 전략·전술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은 조국통일의 3대 원칙과 5대방침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삼으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운동을 벌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로 인민대중을 해방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에서의 통일의 문제를, 미군의 남한점령 및 신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생겨난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를 제기하게 된 根源으로 보며, 한국내에서 공산당 불법화를 구실로 남한인민들은 식민통치를 代行하는 소위 '파쇼정권' 억압과 착취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반식민, 半封建정권을 打倒하고 민주연합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의 남조선혁명론'이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이다.

따라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3대혁명역량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남한내 혁명적당을 구축하고 그 주위에 노동자, 농민을 결속시켜 주력군을 편성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지식인, 청년학생, 소자본계급, 민족자본가 등을 혁명의 보조세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반정부세력을 규합하여 처음에는 대소규모의 투쟁을 전개하다가 정세가 무르익고 여건

이 조성되어 결정적 시기가 오면 무장폭동을 결합한 총공격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전복시켜 聯共政權을 세워 공산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은 무력전략으로부터 혁명전략으로 바뀐후 또다시 그들이 평화적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연방제 전략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연방제 전략은 평화통일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한국의 통일정책을 봉쇄하고 한반도의 적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평화공세 및 정치선전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외교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 냉전대결시대의 논리로서는 한쪽의 붕괴는 다른쪽의 승리가 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었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의 목표는 선전차원에서 '평화통일'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한에 '혁명세력'을 구축하여 혼란과 붕괴를 노리고 있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남한내에서의 민주화 진통과정에서 겪고 있는 정통성시비, 이데올로기 논쟁, 노사분규, 계층간의 갈등, 반미감정 등이 마치 남조선해방의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가는 징후로 오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계급투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에 있어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면서 지금까지 행사해온 동원과 체제유지의 기능은 세계정세의 탈이데올로기화에도 불구하고 수행되고 있으며 또 수행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통일정책 결정에 주는 영향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즉 북한에서 통일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현실주의적)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나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하에서는 경제발전에서 모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인민대중의 삶의 요구를 억제함으로써 스스로 체제를 와해시키는 소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공산통일전략에서 공존전략으로 전이하는 과도기에 있다. 한

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신장, 미국의 확고한 한국안보공약, 한국의 성공적인 북방 정책, 북한경제의 침체등 이러한 여건들은 주체사상의 지침과는 달리 북한의 통일정책의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상기의 여건들은 북한이 그동안 추구해 온 공산통일 전략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북한의 지도층에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경우 북한은 그동안 지키고 가꾸어온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공세적 통일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은 북한의 지도층으로 하여금 공산통일에 대한 미련을 갖게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통일정책은 공산통일과 공존체제의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탈냉전화와 경제우선주의-와 한국사회의 안정화에 따라 북한의 통일정책은 주체사상의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 參考資料

1. 국내자료

가. 단행본

- 국토 통일원,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1990).
- _____, 「북한 개요」(1986).
- 국토 통일원 통일 연수원, 「민주 통일론」(1989).
- 극동문제 연구소, 「북한전서」(1980).
- 길영환, 「남북한 비교 정치론」(서울 : 문맥사, 1988).
- 김갑철 · 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 문우사, 1988).
- 내외정책연구소, 「내외논총」 제4집(1982).
- 「내외통신」, 제725호(1991.1.4).
- 북한 연구소, 「북한총람」(198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주의 · 공산주의건설이론」, 주체사상총서 제5권(서울 : 태백, 1989).
- 서대숙 저 · 서주석 역, 「북한의지도자 김일성」(서울 : 청계연구소, 1989).
- 이명영, 「통일의 조건」(서울 : 종로서적, 1989).
- 자유평론사, 「분단현실과 통일논리」(1988).
- 중앙일보사, 「북한소사전」(월간중앙부록, 1991.1).
- 태백편집부, 「북한의 사상」(서울 : 태백, 1988).
-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1986).
- 한용원, 「통일을 위한 북한연구」(서울 : 박영사, 1989).

나. 논문

- 고병철, “이데올로기와 북한의 대외정책”, 이흥구·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
의 세계」(서울:법문사,1986).
-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
원,1988.
- 김갑철, “북한의 조국통일정책과 논리”, 김갑철 공편, 「북한학개론」(서울:문우사,
1990).
- _____, “주체사상 총서”, 「국제정치논총」, 제30집1호(서울:한국국제정치학회,
1990).
- 김학준, “정치적 통합방안으로서의 연방제,” 이상우 편, 「통일한국의 모색」(서
울:박영사, 1988).
- 박한식,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외정책”, 박재규 편, 「북한의 대외정책」(경남대 국
동문제연구소,1986).
- 서대숙, “1990년대의 북한”, 「주간이데아」, 제1권제20호, 통권제20호(서울:민주
문화아카데미, 1990).
- 신정현,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개와 목표”,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을유문화사,1989).
- 엄수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대남전략,”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
원,1984.
- 윤 황,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 「政正」, 제3집(건국대학교 대학원,
1990).
- 이동익, “현 시점에서 본 북한의 통일전선”, 「공산권연구」(극동문제연구소,
1990.9).
- 이세기, “남북통일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방안”, 「민족통일」(서울:민족

통일축진회, 9·10월호, 1990).

- 이원웅, “주체사상의 통일론과 민족해방(NL)론의 통일이론,” 「통일문제연구」, 제3권1호, 통권 제9호(서울: 통일원, 1991. 봄).
- 이상우, “정치이념, 사회변화와 대남정책”, 김준엽·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 법문사, 1985).
- 정천구, “북한(주체)이데올로기의 성격과 변화전망”, 이용필 외, 「북한의 통치이념과 체제」(1988. 8).
- _____,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북한체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1991. 4. 26).
- 조지훈,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 최완규, “남북연방제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경남대학교, 「논문집」 제11집(1984).
- _____,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정책”, 「통일문제 연구」, 제3권1호, 통권 제9호(서울: 통일원, 1991. 봄).



2. 북한자료

가. 단행본

- 인문과학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평양, 1973).
- 조선노동당 출판부 편,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평양,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평양,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평양,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평양,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평양, 1978).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 탁진 · 김강일 · 박호이재, 「김정일지도자」, 제2부(동경 : 동방사, 1984).

나. 논문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1983).

다. 신문류

· 로동신문, (1990. 5.25).

3. 국외자료

· A · James Gregor, *Contemporary Radical Ideologies*(New York : Random House, 1968).

· An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 A Theory of social and political process*(New York :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8).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 Harcourt, 1968.

· Cho, soon sung, “The politic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1950~1965”, *World Politics*, Vol. XIV, No. 3(January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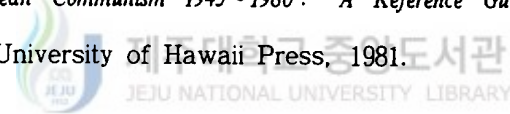
· Chung, Chong-Shick Kim, Gahb-Chol, eds., *North Korean Communnism :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 Dolf sternberger, “Legitimac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9(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9).

· Hampsch, Georg H., *The Theory of Communism*, New York : The Citadel Press,

1965.

- Inoue, Shuhachi, *Modern Korea and Kim Jong Il*, Tokyo : Yuzankaku, 1984.
- Kim, Il-Pyong, *Communist Politics in North Korea*,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75.
- Kihl, Young-Whan,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 Regimes in Contes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 Missouri, Muhammual, et al., *Kimilsungism : Theory and Practice*, Pyongyang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8.
- Scalapino, Robert A., ed., *North Korea Today*,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3.
- Suh, Dae-Sook and Lee, Chae-Jin,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 1918~1948*,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 *Korean Communism 1945~1980 : A Reference Guide to Polittical System*,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 ABSTRACT >

A Study on the Juche Idea and Unification Policy in North Korea

Park Tai Ju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 Joon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nature of the political ideology, Juche Idea, and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aspects of unification policy in North Korea.

The Juche Idea is a practical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to North Korea and a logic to justify only Kimilsung, which is a ruling ideology in the early age of North Korea regime. Kimilsung uses the Juche Idea to make South Korea communize and to wield his power long. Therefore, the Juche Idea has been developed to build the unification strategy on the basis of revolution, liberation and absorption-centered communization.

However, the recent changes in conditions of Korea, that is, the extension

of economic and military power of South Korea, the firm security policy of America over South Korea, the successful policy toward the North and North Korea's economic stagnation, make North Korea readjust its unification policy indispensably.

Because of the above changes, the leaders of North Korea may realize their communist unification strategy illusional. Hence, North Korea will make more efforts to keep the structure of its society which has been long pursued. And also North Korea may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mend its aggressive unification strategy. However, it is true that a little instability of Korea can make the leaders of North Korea retain a lingering desire for its communist unification.

Thus, North Korea will pursue two goals of unification policy, communist unification and coexistence. But, North Korea may change its unification policy bounded on the Juche Idea, with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alleviation of cold war, economy-priority and the stability of Korea.

